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음 6월 6일) 제 185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 ↓

교통·자살 등 4대분야 338명 전년동기대비 8.6% 줄어  
 도, TF팀 회의서 집중중명시설 LED 투광기 설치 등 논의

올 상반기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4대 분야(교통·화재·자살·감염병)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 33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6%(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망자 감축목표를 설정한 당시(2012~2014년 평균)와 비교해서는 27.8%(130명)라는 감축률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까지 사망자가 증가한 분야는 없으며, 교통과 자살분야는 각각 10명(7.4%)과 22명(10.5%)씩 감소했다.

교통과 자살분야의 경우 3년 연속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살 사망자의 경우는 목표당시와 비교하여 사망자가 39%(↓1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분야의 경우 금년도 2분기 기준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화재 사망자와 발생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5차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이행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중점 논의하였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유형 중 보행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도심 제한속도를 현행 60km에서 50km로 하향하는 방안과 심야시간 횡단보도 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중명시설인 LED투광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도로 폭이 좁은 생활권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기존의 노면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색채 도입을 통하

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서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또한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51%를 차지하는 노인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노인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추가 지정과 함께,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칭 'ICT 기반 졸음·음주운전 방지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현용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문화를 뿌리 내리는 일은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없다"며,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보다 철실하게 묻고 도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안전전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도민의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사고는 물론, 교통사고와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무더위엔 물놀이' 27일 전북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주에 있는 전북경찰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 빛물 '활용하고' 수도요금 '감면받고'

전주시, 내달부터 빛물이용시설 사용자  
 상수도 사용료 최대 30% 감면키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빛물이용시설 사용자에게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본격화한다.

이는 친환경 대체 수자원인 빛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실천하는 빛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이다.

27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8월 고지분부터 빛물이용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적용키로 했다.

수도요금 감면액은 빛물이용시설로 집수해 사용한 월간 빛물 사용량의 30%에 대해서 상하수도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게 되며, 그 대상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39개소이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전주시 물·에너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감면신청 시설에 대해 매월 정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빛물시설 사용자가 매월 빛물 사용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인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빛물사용량 등록시스템(자가 검침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전주시는 빛물 사용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공인유량계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도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빛물이용시설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등록 신청하고 매월 25일 기준 월간 빛물 사용량을 직접 파악해 검침기록부에 입력하면 된다.

현재 전주시역 빛물이용시설은 올 상반기에 추가 설치된 5개소를 포함해 총 150개소로, 조경과 텃밭, 청소, 세차, 화장실, 학습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운영 중이던 빛물시설 145개소에 대한 운영·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130개소가 정상적으로 사용 중으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용 기자

전주지검 검사장에  
 송인택 청주지검장



제44대 전주지검 검사장에 송인택 청주지검 검사장(54·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8월 1일자)를 단행했다.

대전 출신인 송인택 검사장은 충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송 검사장은 조직범죄와 강력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천지검 차장검사 재직시절에는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해운터미널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항만업계 비리를 파헤치기도 했다.

한편 현 장호중 전주지검장(50·사법연수원 21기)은 부산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뉴시스

## 조운선 '블랙리스트' 무죄났다... 김기춘 등 6인은 '유죄'

조운선, 국회 위증만 유죄 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현)는 27일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다만 조운선(51)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 진술에 비해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화계급 지원배제 명단 등의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부족해 이를 지지하거나 보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김소영(51) 전 문체부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하달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대한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으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작용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모두 징역 3~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에게는 징역 5년을,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쉽다.”

매일 INDEX  
 3면 - 검사장 인사 파격 없었다

맛있는 멋있는 흥있는

# 2017 고창 갯벌축제

2017.7.28(금) ▶ 30(일) (3일간)  
 고창군 심원면 만돌·하전 갯벌체험학습장